

북미 진출 전략

- 미국 객 3 주 2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가. 시장 전망

경제 연착륙(2%대 경제 성장률)을 위한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작 → 확장세는 둔화 But 침체 없는 경기 성장 전망

- 25년 실질성장률: 2.2%(미국), 2.4%(캐나다) 전망
 - 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긴축정책에 따른 침체 우려 But 강력한 성장세 이어왔으나, 누적된 통화 긴축 효과로 24년 하반기부터 성장세 둔화 예상
- 24년 9월 FED가 금리 인하 시작 →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이어온 통화 긴축 정책 종료(금리 인하 종료 = 긴축 종료)
 - 이에 따라 목표한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에 도달할 가능성 상승
 - 겨에 개입 빠고 시장의 힘으로 돌아갈 때 연착륙을 할 것으로 예상중(= 현재 경기 좋다는 평가)

시장의 관심은 빅컷(0.5% 금리 인하)으로 인한 미국 경제 '연착륙' 유도 가능 여부 → 정부 개입 없이 가능한지 여부

-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24.10)에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 시 올해 0.25%씩 두차례 총 50bp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시사)

〈미국 경제의 연착륙 시나리오〉

지표	연착륙	경기 둔화 우려	경착륙
경제성장률	2%대 유지	1% 내외 유지	0%대 성장
물가상승률	2.50%	2.00%	1.50%
실업률	4.2~4.4%	4.5~5.0%	5.0% 이상

- IMF도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7%에서 지난 22일 1.8%로 내림
 -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경기 침체 가능성 25% → 37% 증가)
 - 경제성장률 = 경기둔화화
- 물가상승률: 3% 전망
- 3월 실업률: 4.2% = 연착륙
- 22년 물가(7.9%) 잡으려고 금리 상승 → 23년 물가(4.2%) → 24년 하반기(3.1%)에 금리 하락

2. 25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트럼프 정부 시나리오에 따른 정책 변화

- 트럼프(공화당) 당선

- **블루월 3개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선벨트 4개주**(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 선벨트: 퇴직한 부자들이 자주 가는 남쪽 지역(공화당)

※ 블루월: 러스트벨트(옛 중공업 공업지대; 노조로 인한 민주당 텃밭)지역에서 분리된 것으로 민주당 우위

※ 선벨트: 미국 남부지역으로 공화당 우세주가 많음

- 119대 연방 의회 선거에서 **상, 하원 모두 다수당 확보**
 - **상원 100석**(50개 주 두 명씩):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
 -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는 의석 60석 확보 실패
 - 하원: 공화당 219석, 민주당 215석, 1석 공석
- 주지사(4년마다 대선과 같은 해에 투표; 50명): 공화당 27명, 민주당 23명

투표 특징

- 인종: 라티노(히스패닉인), 아시아인이 트럼프쪽으로 많은 투표
- 성별: 백인 남성이 특히 많이 지지
- 학력: 학력이 높을 수록 해리스 지지하는 경향

트럼프, 한층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 추진 전망

- 트럼프 관세전략: **상호관세, 보편관세**
- 미국의 ****대외 무역적자 해소를****최우선 경제 과제 중 하나로 설정
 - 전 세계 수입에 보편(무차별) 기본 관세 10 ~ 20% 부과
 - 대중 수입에 대상 관세율을 60%로 인상 공약
- **상호무역법** 입법을 추진
 - 상호무역법: 상대국이 미국에 관세나 세금을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한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관세

트럼프 1기 행정부 추진 관세 정책

- + 무역법301조(슈퍼 301조 관세):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부과
- + 무역법232조(무역확장법 232조): ****안보****
- + 세이프가드 관세: 합법으로 타당하다면 WTO 제소해도 소용 없는 임시 조치

트럼프 1기 행정부 추진 관세 정책

-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조항****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해당 조항이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의 안보를 명목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 **다른 수입제한조치에 비해 제한 범위가 넓고 특정 기한 없음**
- **세이프가드**: 특정물품 수입 급증으로 수입국의 국내 산업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 수입 임시 제한 or 관세 인상을 통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 ****GATT조항(제 19조)****에도 규정된 **임시조치**

트럼프 집권 시 환율 문제가 중요한 통상 이슈로 부상 예상

-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 무역적자 원인: 달러 고평가
 - IF 저평가 → 수출 유리, 수입 불리
- 약달러를 통한 미국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수단 활용 예상
 -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
 - 정부 외환시장 개입 → 달러 인덱스 하락
 - 외국 정부 상대로 통화 가치 절차 압박
- 관세를 무기로 쓰고 있지만, 환율 정책을 쓸 가능성이 크다: 기축통화 발행 비용의 일정한 분담을 원함

반도체 수출입 규제 강화와 범위확대 예상

- 트럼프는 첨단 노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대중 수출 통제를 포함한 규제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일부 범용기술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Legacy: 자동차, 항공기, 가전 등에 쓰이는 다양한 기술(현재 반도체 시장의 70%, 중국 29% 시장 점유율)
-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강화, 국가안보 목적 관세 부과, 중국의 상계 관세 부과, 미국의 대중 반도체 투자 규제, 중국산 조달 금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임
- 경제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미국 우선주의** 경제 추구 전망
 - 대규모 감세, 세금 공제 확대, 규제 완화로 소비와 경제 성장 촉진
 - 25년 만료 예정인 17년 트럼프 세제개혁법(**TCJA: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 연장 및 보완 추진
- 감세 공약 요약

기존	【2017 트럼프 세제개혁법(TCJA, Tax Cuts and Jobs Act)】(*25.2. 일몰 예정)		
* 일몰 폐지 추진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법인세(35→21%) 인하, 소득세 구간 축소(7→3단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39.5→37%) </div>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 •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 증가(500만 달러→1,360만 달러) </div>		
	20% 예상 법인세	제조업(미국 내 생산·미국인 고용) 기업 대상 최고세율 15%로 인하	<=> 해리스 법인세율 28%
신규	급여세	팀·초과 근무 수당 대상 폐지	팀에 대한 세금 면제

- **Buy American**(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을 통한 자국 산업 보호, 제조업 수요 증대
 -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에 있어(모든 물품 X) 미국산 우선 구매가 가능하므로 미국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음

미국 내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에너지 안보, 자립 촉진 예상

- **전통에너지 생산 확대**: 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세금 감면을 통한 투자/생산 장려, 연방 토지 내 석유/가스 시추 허가 등
- **기존 친환경 정책 철회**: 그린 뉴딜, 전기차 의무화 및 탄소 배출량 감축 정책
- **미국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 확보**: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ESG 정책 중단

① 화석연료 관련: 연방 공유지에서의 시추 허용, 알래스카 북극 보호지역에서 시추 재개, 인프라(파이프라인, 수출터미널 등) 확대, 수입파쇄법(일명 프래킹(fracking)) . 셰일오일 생산 핵심 기법으로 환경단체들은 토양오염을 유발한다며 반대) 지지, 석탄산업규제 폐지 등
②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은 태양광의 보조금 철회 . 특히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상 풍력발전을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동
③ 기후협약 · 환경 규제 관련: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등 국제 기후 이니셔티브 불참, 관련 예산 삭감 및 인원 감축(ex. 환경보호청, 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부서 등), 차량 및 가전기구 에너지 효율 기준 완화, IRA 무력화 등
④ 전기 · 전력 관련: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확대, 발전소 건설 신속 승인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에너지·기후 정책과 시장평가 - KCIF 국제금융센터 - 와이슈

양자 무역 협상 선호 및 다자 무역협정 재검토 전망

- IPEF(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TTC(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 USMCA 등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및 국가 간 무역협정 재협상 시사
- PNTR(항구적정상무역관계) = GAT 1조 최혜국 대우(MFN)**

정책요소	바이든	트럼프
미중관계	디리스킹, 대중국 전략 품목 301조 관세 부과	디커플링, 중국의 PNTR 지위 철회
무역통상	다자간 무역협상	양자 간 무역협상
공급망	프렌드/니어쇼어링	리쇼어링 및 온쇼어링 강화
기후변화	IRA, 기후변화 대응	파리기후협정 재탈퇴
제조업	Buy American 정책 유지	IRA 기후 관련 지원금 축소, CHIPS법 보조금 축소, 폐지

나. 북미 AI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전략

25년 글로벌 AI 시장은 전년 대비 18.7% 상승한 7,576억 달러 규모 전망







- 글로벌 AI 지수상 AI 경쟁력(83개국 기준): 미국 꾸준히 1위, 캐나다 8위, 한국 6위
- AI 산업 육성을 위한 북미 양국의 정책 지원
- 바이든 정부는 국가 AI 연구기관(**NAIRR**)설립
- 23년 미국 정부는 AI 위험성을 지적하는 행정명령 공표, 진흥 규정은 법률로 지정하고 규제는 행정명령으로 운용하는 전략을 통해 AI 산업 진흥을 **우선시**하는 정책 중
- 바이든(규제) < 트럼프(진흥)

AI 기술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미 제조업 부흥 견인

- 기업들은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도입
- 첨단 제조 분야에 미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막대한 자본력이 동 시장 성장동력으로 분석
- 사례

종류	사례
물류 자동화: 로봇 기반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문 이행 비용 감축	 Amazon 현재 75만 대 이상의 이동식 로봇을 전 세계 물류창고에서 활용 중이며, 매년 <u>물류센터를 통해 처리되는 약 50억 건의 주문 중 75%가 로봇에 의해 처리되고 있음</u>
	 Walmart 2026년까지 미국 전역에 AI, ML, 로봇틱스 등 차세대 기술을 접합시킨 5곳의 차세대 풀필먼트 센터(Next Generation Fulfillment Center) 개점 계획을 발표했으며, 향후 차세대 물류센터와 기존 물류센터, 매장을 통해 <u>미국 인구 95%에 익일 또는 2일 배송을, 80%에 당일 배송을 실현한다는 계획 보유</u>

자료: KOTRA 해외시장뉴스(2024년)

종류	사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제조 공정 전 단계를 디지털 공간에 복제해 사전 제조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공정 모델을 도출, 생산 최적화 및 품질 강화를 실현	 Eli Lilly 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쥘바운드(Zepbound)를 출시한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생산 공정에 대한 실시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 이를 통해 일라이 측은 추후 공정 중 발생 가능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식별해 설비 중단을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설계 기반 품질 고도화(Quality by Design): 통계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제조 과정을 최적화해 불량률을 줄이고 일관된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 운영 관리 방식으로, 종전의 제조 공정과 품질 관리로 이원된 제조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융합되는 것을 의미	 Johnson & Johnson 2018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애저(Azure)를 활용해 공급망 관리에서부터 제조, 포장, 출고 등 <u>전 단계</u> 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 및 분석해 발생 가능한 품질 오류 빈도를 상당 부분 낮추고 있음
머신비전: 머신비전 기술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이라고도 불리며, 컴퓨터가 마치 인간의 눈과 뇌와 같이 이미지 처리, 패턴 인식 등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해석하는 기술을 의미	제약·바이오 업계 머신비전 기술은 포장·라벨·캡·유리병 등에 대한 인간의 육안 검사 대체에서부터 다른 산업군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감지, 의약품 분류 등 다양한 부문에서 폭넓게 활용
재고 관리: AI 기반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 및 재고 관리. 드론이 넓은 창고를 신속하게 이동하며 재고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또한, 드론은 창고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안전 점검에도 활용돼 직원들이 높은 곳이나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할 필요를 줄여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음	 Amazon 물류창고에 드론을 채택해 재고 관리 효율성을 23% 개선하고 운영을 간소화하면서 업계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설정
	 Walmart <u>드론을 통해 재고 조사 시간을 기존의 한 달에서 단 하루로 단축</u>
	 Barrett Distribution Centers 수작업 검사로 시간당 20개의 재고 위치만 처리 가능했던 일을 드론을 활용해 수행한 결과, 시간당 350개까지 처리 가능
	 DSV 파일럿 연구 수행 결과, 자율 비행 드론을 사용해 데이터 수집 시간을 50% 절감할 수 있었으며, 기술이 완전히 도입되면 그 절감 효과는 80%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 결과 공개

미국 데이터 센터가 촉발한 전력 수요 증가 대응 본격화

첨단 기술 도입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 So, **트럼프가 전통 에너지를 중요하게 생각**
- 디지털화, AI 기술 채택에 따른 데이터 센터 설립이 늘면서 필요 전력량도 동반 상승
 - 현재같은 속도로 데이터 센터 증가 시 운영에 필요한 전력 소비량: 2030년말까지 현 전력 소비량의 2.5배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미 10대 전력 기업 가운데 9개가 **최근 전력 수요 급증 요인으로 데이터 센터를 꼽음**
- 일부 지역: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사용 급증 대응을 위해 화력 발전소 폐쇄 지연, 전력 확보 가능 지역 중심으로 토지 가격 상승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하는 ESS 시장

- 재생에너지 전환과 첨단 기술도입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ESS 수요 및 설치가 큰 폭으로 증가
- 신규 전력 생산에서 ESS를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 배터리 가격하락 → ESS 경제성이 개선
- IRA를 통한 세제 혜택 등이 ESS 시장 성장의 요인으로 분석
-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니조나 등 일조량이 풍부한 미 서부와 남부 지역 중심으로 대규모 ESS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

탄소 중립 노력에 관심 높아지는 원자력 발전 사업

- 건설에 시간 소요가 크지만 안전을 가정하면 아주 높은 효율성
- 최근 전기화 트렌드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 기조 강화로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재조명
-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배치 가속화 추진 예정
- **캐나다 정부 SMR 도입 적극 추진**
- 한국: SMR 기술 분야에서 높은 평가, 23년 중순 SMART를 포함한 SMR 관련 협약 체결(한-캐)

마. 북미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속 수출 전망

미, 캐나다는 공통의 가치와 깊은 인적 연결을 바탕으로 긴밀한 관계 유지

-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미국), 23년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77.4%****가 미국으로 향함
- 캐나다 원유 97% 미국으로 수출, 미국의 캐나다 무역의존도(25%)
- 공급망 재건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 축소
 - 북미 국가들은 GVC에서 RVC, 리쇼어링 등으로 공급망 구조 지역화를 적극 추진
 - 북미 동맹 강화, 경제/정치/안보적 이유로 대중국 경제 의존도 줄이려는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작용

안보 개념 확장을 기반으로 한 미국 공급망 재편 전략

- 국가 안보 위협 요소: 전쟁/테러 → 감염병, 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 다양화
- 국가 안보 개념과 무역/통상을 연계해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중
- 미국의 대중 견제가 구체화되고 포괄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한 대중 견제 관련 법안 추진 중**
- **캐나다 정부의 대중 견제 기조 강화, 동맹국 공급망 참여 노력 확대**
 -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6%이던 수입 관세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할 계획을 발표

바. 바이퍼 케이션, 초고가 아니면 초저가인 평균 실종 사회

- 소비 양극화: 질적으로 다른 두 갈래로 전환되는 현상
- **중산층 감소, 저소득&고소득층 증가**
 - 저소득층: 4%p 증가
 - 고소득층: 7%p 증가
- **고물가, 고금리지속 → 소득보다 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중산층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 고소득층: 고물가에도 명품과 고가의 서비스를 지속해서 소비
 - 상위 20% 고소득층: 해외 여행, 엔터테인먼트, 기타 서비스의 지속적 지출
- 경제적 여유 있는 소비자: 여행(1순위) 등 서비스 소비 + 호화로운 여행 선호
 - 여행객이 덜 붐비는 비수기 여행 + 고급 여행 패키지 선호
- **요노족(You Only Need One)** 등장
- 식품, 에너지,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 → 저소득층에게 부담
- 팬데믹 동안의 저축을 모두 소진, 월급에 의존해 생활, 신용카드 사용액이 증가, 자동차와 기타 대출 연체가 증가 추세

양극단을 겨냥한 분리 마케팅(프리미엄화와 초저가 마케팅) 추진

- 카드사 프리미엄 고객에게는 회원비를 면제해주는 제휴 서비스로 고소득층 고객을 유입시켜 소비 자극
 - 유기농 신선상품, 하이엔드 브랜드 입점
- 식품, 생필품군에서도 초고가, 초저가 제품을 동시에 판매 중인 추세
- 패스트푸드 초저가 메뉴와 초고가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 동시에 트렌드로 언급되며 **외식 문화도 양극화 현상 반영**

4. 비즈니스 환경 분석

정치환경: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판도 변화

-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 우선주의 정책 회귀 및 대내외 정책 변화
- 감세, 보편 관세 부과, 국경 보안 강화, 범죄 및 이민 정책 개혁
- 대중 정책에 강경한 입장, 경제/안보 전반의 중국 견제 강화 추구 등
- 미국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립을 통한 자국 산업 활성화 전망
 - 기업에 대한 **감세, 규제완화** → 경제 회복 가속화, 물가 억제, 금리 정상화 추구
 - **디커플링 강화**: 대중국 무역, 투자 제재 확대와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 반도체,에너지, 희소금속 등 전략적 핵심 분야에서 자국 생산 확대

캐나다 트뤼도 총리(자유당)집권 9년차, 흔들리는 지지율

- 중국의 연방 총선 개입 의혹, 트럭 운전사 시위 중 대피, 공금 횡령 등으로 지지도 하락
- 보수당 피에르 포일리에브르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남
 - 포일리에브르: 과도한 정부 부채와 부동산 버블 해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현재 총리: 마크 카니(자유당)**

- 환경 정책, 난민 수용과 소수 민족 포용과 같은 이민 정책 등 업적은 호평
- 시크교 독립운동가 피살 관련 인도와잉 외교 갈등

라. 정책, 규제 환경

-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확대
 -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무역 불균형 해소, 자국 제조업 강화 및 산업 육성 추진
 - **리쇼어링, 니어쇼어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 **양자간 무역 협상 우선**, 다자간 무역협정 탈퇴 및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 시사
- 26년 USMCA 6년 재검토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멕시코 우회 수입 방지 조치 반영, 에너지, 기술, 통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재협상 및 규제 강화 포함 전망

첨단산업 중심의 공급망 강화 기조 지속

-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 구축을 목표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보조금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반도체 법 보조금 유지**)
-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문제를 국가안보와 직접적 연결을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추진
-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국내 공급망 현황과 취약점 분석을 바탕으로 공급망 확보 추진 중(상호관세에서 제외)
 - 필수 의약품의 자국 생산 촉진을 위해 급진적 통화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행정명령 발동**가능성
주시 필요
- **행정명령**: 강력한 정책도구로 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령하는 지시로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대중 규제 기조 속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한 무역, 투자 제재 강화

- 중국산 전자제품, 철강, 의약품의 수입 4년 내 단계적 중단 추진
- 중국의 ****항구적정상무역 관계(PNTR; 최혜국대우)****지위 철회로 고관세 부과